

# 주간 통일정세

2015-26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제2연평해전 남측 움직임에 반발...“불벼락으로 초토화”(7/2, 조선중앙TV)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괴뢰패당이 전례 없는 대결광대극을 연이어 벌여 놓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조평통은 북침전쟁 열기의 사례로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남한 해군이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실시한 해상기동훈련 등을 꼽았음.
  -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도발망동으로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라며 “이는 과소 폭정과 민생악화로 폭발 직전에 이른 민심을 북남대결로 돌려 통치위기에 빠뜨려 버티고 버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체제통일 시도는 대결과 전쟁만 가져올 것”(6/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괴뢰들은 6·15 공동선언에 도전하면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남조선당국의 체제통일 책동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낳는 기본화근”이라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우려함.
  - 신문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고착된지도 반세기 훨씬 넘었다”면서 “누구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북한, 남측 사드 대비 “최첨단 타격수단 개발할 것”(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논설에서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주시 하면서 우리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이것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미제국주의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덧붙임.
  - 또한 북한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과 남한 주변국간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고 군사적 위험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충돌 발생시 미국의 핵 전초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은 주변국의 1차적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 “남측이 7·4공동성명 정신 무시”(7/4,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7·4공동성명 43주년인 4일 논설에서 “오늘의 남북관계는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극도의 파국 상태에 처해있다”고 진단함.
  - 신문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함.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관계자들도 4일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강조하며 남측이 북측의 제안에 등을 돌리고 “반공화국 뼈라 살포와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인권백서에 강력 반발...“무자비한 징벌”(7/5,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5일 “인권 모략 소동은 총포 소동에 못지않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부모처자들까지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접스러운 거짓말만 굶어모은 너절하기 짝이 없는 오물보따리에 불과하다”고 혈뜰음.
  - 이어 남한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라며 “극악한 인권 교살자들이 수치도 모르고 ‘북 인권백서’ 발간 놀음을 벌인 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희비극”이라고 험담함.

- 북한은 또 “인권 간관 밑에 감행되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도발 소동이 범죄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흥계의 산물로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부채질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몰아온다”고 경고함.
- 민주조선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가 “우리 존엄에 먹칠을 하고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려는 발악”이라고 반발하고 “인권 모략 소동에 광분하는 동족대결의 우리들을 가장 처절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단속정 서해 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6/30,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22분께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 1척이 NLL을 약 0.8 노티컬마일(약 1.5km)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이 경고 통신에 이어 경고 사격을 해 북쪽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어 이번에 NLL을 넘어온 단속정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NLL을 월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금강산관광 중단은 남한탓…길은 열어놓고 있다”(7/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것은 남한이 관광객 사건을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그 누구의 돈줄이니 하며 관광재개를 고의로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려 금강산관광 재개를

- 위한 사업에 아량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지금도 관광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힘.
- 북한측의 이번 입장은 이종홍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최근 “정부가 조속히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을 위한 피해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대변인은 이어 남측 정부에 대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국제관광에 대해 합의 파기니, 국제법 위반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다못해 다른 나라들에 찾아다니며 금강산에 관광객과 투자자들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해외기업가들을 위협공갈하는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정부의 제3국적자(북한과 무기거래 협의) 금융제재 대상 지정 관련 ‘북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체제대결을 노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北)는 무엄하게 날뛰는 괴뢰패당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들썩을 만단의 격동태세에 진입하였다’고 위협(6.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오는 8월 ‘韓美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 예정 관련 “북침전쟁 연습을 계속 벌리는 한 북남사이의 신의 있는 대화와 관계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남한의 ‘정책전환’ 주장(6.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해군·해병대의 연대급 합동상륙훈련 실시(6.25-7.5)에 대해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북침공격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속 비난(6.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北核발언(고립과 제재만 가져올 뿐, 가장 심각한 도전 등) 관련 ‘핵억제력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여론화하며 외세와 결탁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소동을 일촉 강화하려는 매국적 추태’라고 비난(7.1,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對北 금융제재 관련 ‘현 남조선 실태는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이라며 ‘박OO패당이 출로를 반공화국 대결소동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 및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빚어낼 뿐’이라고 재차 비방(7.1, 중앙통신·민주조선·평양방송)
-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1098호(7.2)】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후안무치한 정치사기꾼, 희세의 파쇼광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대통령 실명 비난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반역정권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7.2,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북핵위협, 북 인권문제' 발언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등을 거론하며 '동쪽에 대한 비방·중상은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위험한 독소'라며 '남조선 당국의 도발적 망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7.2,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제3국적자 7명) 조치를 "가장 공격적인 대결정책의 표현"이라며 "복수의 불벼락을 내릴 만단의 격동태세에 진입했다"고 위협(7.3, 중앙통신)
- 남한의 現 메르스 사태(6.26 현재, 31명 사망)는 '인민을 등진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적 악정, 정권안보를 위한 괴뢰집권자의 망동이 근원'이라고 주장(7.3, 중앙방송)
- '차대통령, 전국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청와대, 6.30)'에서의 對北발언 관련 '즐개들에게 동쪽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전쟁광기를 불어넣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라고 비난(7.4, 중앙통신·노동신문)하고 있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이라고 책임전가(7.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7·4공동성명 발표 43주년 관련 '6.15·10.4선언은 7.4공동성명의 확고한 계승이며 그 심화발전'이라고 강조하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선동(7.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파쇼적 폭거이고 극악한 정치테러'라며 '박OO와 그 패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극악한 교살자'라고 비난(7.5, 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시정배" 막말(6/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자이드 최고대표가 북한에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라기보다 어느 시장에서 좌판 장사나 해먹을 시정배 임이 틀림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함.
  - 또한 "도대체 자이드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신성한 유엔 회원국인 우리 공화국에 삿대질하는가"고 묻고 "유엔 회원국 자격은 자이드와 같은 시정배가 아니라

유엔 헌장과 성원국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 이지스함 일본 배치’ 비난(6/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기어이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이미 전략, 전술 로켓을 장비한 강력한 타격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경고함.
  - 통신은 미국 이지스 순양함 찬셀러스빌호의 일본 요코스카(横須賀)항 배치와 7월 미국 무인정찰기 4대를 미사와(三澤) 비행장에 일시 주둔시킨다는 계획 등을 자세히 거론하며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다시금 여지 없이 드러났다”고 비난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北 “납치조사 시간 더 필요”…日 제재강화 보류(7/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밝혔다고 보도함.
  -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북간에 합의 된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금도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EU, 북한 고려항공 역내 운항 계속 제한키로(6/29,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의 EU 역내 운항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이어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가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취항 금지 대상’이었다가 2010년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도입 이후 일부 운항은 허용되는 ‘운항 제한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함.
  - 매체는 이번 조치로 고려항공의 대부분 기종은 계속 EU 회원국 취항이 금지 되고,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는 취항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전함.

## 자. 기타 국가

- 북한 강석주, 쿠바 라울 카스트로와 우호강화 논의(6/29, 조선중앙통신)
  - 쿠바를 방문 중인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지난 27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호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라울 의장은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원칙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면서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 주석이 마련한 두 나라 친선관계는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통신은 보도함.



- 북한 '38명 사망' 튀니지 테러 피해국에 위로 전문(7/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튀니지 휴양지 테러 사건과 관련해 튀니지공화국 대통령에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베지 카이드 에십시 튀니지 대통령에게 “최근 테러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튀니지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힘.
  - 또한 리수용 외무상은 영국 필립 해몬드 외무부 장관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장관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신이 전함.
  
- “북한, 평양주재 외교관에 8개 지역만 여행 허용”(7/2, 미국의소리)
  - 조이스 애너레이 영국 외무부 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평양, 신안주, 원산, 금강산, 사리원, 송림, 황해남도 과일군, 해주 등 북한의 8개 지역에 대해서만 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북한, 연쇄테러 이집트에 위로 전문(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연쇄테러로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이집트의 압텔 파타 엘시시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영남 위원장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무장테러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전하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며 우리는 귀국에서 일어난 이번 테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임.

- 쿠바를 방문 중인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강석주 당중앙위 비서), 6월 27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담화(6.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기관지 책임주필(바체슬라브 곤차로프)과 일행, 6월 29일 귀국(6.29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정부의 '미국이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함께 반격할 수 있다'는 견해 표명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 해위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속심"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대결책동 중단' 촉구(6.30, 중앙통신·민주조선)
- 리수용(외무상, 나미비아 방문 北 정부대표단장), 6월 27일 나미비아 부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네툼보 난디 은다이트와)과 회담 및 6월 28일 윈드후크 출발(6.30,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원자력협정 체결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미국이야말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뜨운 핵범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온 최대의 장본인' 이라고 비난(7.2,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당국의 '조선인 강제징용' 산업시설 유네스코 등록을 비판하는 日 시민단체의 성명을 거론하며 '일본민심의 이러한 동향은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인류양심의 지향과 의지의 반영'이라며 '일본은 이제라도 역사 앞에 정직하고 인간 앞에 성실해야 한다'고 강조(7.2,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강석주 당중앙위 비서), 7월 2일 쿠바 방문 후 귀환(7.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7월 2일 아프리카 방문 후 귀환(7.2, 중앙통신)
- 미국의 '북핵·미사일 위협' 거론을 '사드의 남한 배치 합리화·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北) 식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계속 개발완성하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7.3,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2007년 영국에 배송)을 거론하며 '미국이 세계적 범위에서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거'라며 '미국의 추악한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 수 없다'고 비난(7.5, 중앙통신·민주조선)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평양 채소농장 격찬...“농촌 문화혁명 일으키자”(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회주의 농촌 문화건설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지난해 6월에도 이 농장을 찾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은 1년간 각종 시설물을 짓는 등 새로 단장한 농장을 보고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 폭의 그림 같다,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변화)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그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 불씨로 해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자 의지”라며 평양시 인근 농장을 이 농장처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궁궐 같이 지은’ 김책공대 연구소 시찰(7/3, 조선중앙통신)

- 최첨단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건설공사를 마무리 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궁궐 같이 짓고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일 보도함.
- 통신은 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대 자동화연구소를 현지도 하셨다”며 “대학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궁궐 같은 연구소를 건설해주신 김정은 동지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연구사들이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구소 건물을 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잘 건설한 ‘멋쟁이 건축물’”, “형식이 새롭고 특색 있어 최첨단 연구기지로서의 체모(모양새)를 완벽히 갖췄다”고 칭찬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구소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제407군부대, 제101군부대를 치하하는 한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현대적인 것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해외근무 北 중간간부 동요 심각…일부 국내 입국”(7/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통치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중간간부의 동요와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뉴스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여 2일 “북한의 최고위층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나 중간 간부급,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중간 간부들은 동요와 이탈이 심각하다”면서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고 일부는 국내로 들어와 있다”고 밝힘.

## 다. 공식 행사

- 북한, '옛청사의 6배' 평양국제공항 신청사 준공식(7/1,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이 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문이 될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은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기념사에서 “평양의 관문이며 나라의 얼굴인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떠선 것은 커다란 경사”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박 총리는 평양국제공항 청사가 노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치켜세우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역사를 세계적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구상과 작전을 펼쳤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지방의회선거 선거자명부 공시(7/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4일 이번 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선거자 명부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해 작성됐다”며 이같이 전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일성 초상화 지키다 숨진 경찰들 영웅으로 미화(7/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4면 전체에 걸쳐 이들의 영웅담을 소개하고 ‘고동치는 불사조의 심장, 노동당의 무쇠방패’로 이들을 미화함.
  - 주인공은 함경남도 단천시 인민보안서(경찰서) 소속 윤광남(48)과 리선일(21)이며, 신문은 “비록 그들의 육신은 태울 수 있었으나 그 어떤 열풍도 불덩어리도 구호나무는 태우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대대적으로 찬양함.

- 국가우표발행국, 마두산혁명전적지 구호문헌을 반영한 새 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6.29, 중앙통신)
- 과학자·기술자돌격대운동발단 40돌 즈음 ‘모든 일꾼들과 과학자·기술자들은 지난 40년간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시대의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고 독려(7.1,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진수(김일성상계관인이며 노력영웅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와 허덕복(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노력영웅인 평양시농근맹위원장)에게 90회·70회 생일상 전달(7.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북도 농업부문사업 현지 요해 및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방문(7.3,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북한, 가뭄으로 수인성 질병 늘자 유엔에 의약품 요청(7/5, 미국의소리)
  -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이 수질 악화로 수인성 질병이 늘어나자 유엔에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황해도 가뭄 상황을 둘러본 뒤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힘.
  - 공동조사단은 지난 18개월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북한이 음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에 시달리면서 수인성 질병이 늘어났으며, 특히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함.

- 가뭄 피해 지역에서 보리 등 이모작 수확량이 작년보다 40~50%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가을 쌀과 강냉이 수확량도 30~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중 접경지역 관광개발구 2개소 中자본으로 본격 개발(6/29, 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에 발표된 관광특구 및 19개 경제특구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 관광개발구 2개소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 연합뉴스는 29일 중국 지린(吉林)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자치주)는 “올해 초부터 북한의 무봉국제관광특구(이하 무봉특구) 개발에 발맞춰 북한 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해 공동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뉴스는 북한은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2017년까지 1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등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함.
- “중국, 북한 나진항 이용 본격화”(7/1,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중국 훈춘(琿春)시 정부를 인용해 중국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북한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 훈춘시는 “두 차례 이뤄진 훈춘~나진~상하이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나진항과 상하이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방송은 전함.
  - 연합뉴스는 최근 북중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와 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싱크탱크 소장 “AIIB 참여 관심있다”(7/2, 교도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김철 소장(42)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

- 은행(AIIB)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평양발로 보도함.
- 김 소장은 2일 평양에서 진행한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AIIB가) 아시아의 경제 개발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은행이 됐으면 좋겠다”며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이란에 ‘가뭄 대응 장비’ 긴급지원 요청(7/2, IRNA통신, 파르스통신)

-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강삼현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30일 사예드 아미르 모센 지아에 이란 적신월사 대표를 만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보도함.
- 이 자리에서 강 대사는 이란 적신월사에 “가뭄 극복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함.
- 강 대사는 대북 경제제재와 전례 없는 가뭄으로 북한이 식량 공급 등 경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 캐나다 단체, 북한에 영양소가루 200만포 지원(7/3, 미국의소리)

- 캐나다 민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임산부를 위한 미량 영양소 가루 200만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퍼스트 스텝스는 7천500여명의 임산부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하루 한 포씩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스프링클스를 남포항을 통해 원산과 남포의 진료소로 보냈다고 전함.
- 이어 이 단체는 어린이를 위한 두유를 만들 수 있는 메주콩 40t도 북한으로 함께 보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유럽연합, 북한국영보험사 독일지사 제재명단에 추가(7/4, 연합뉴스)

-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 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제보험회사 및 관련자 6명을 자금 동결과 경제적 자산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유럽연합 측은 “해당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의 국영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어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기존 제재 대상인 39호실(김정은 비자금 담당 기구)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남새온실·살림집·공공건물(평양시 장천지구) 준공식, 6월 30일 곽범기(黨 비서)·리철만(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김수길(평양시黨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6.30, 평양방송·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생화학무기 연구원, 생체실험 자료 들고 망명(7/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자강도의 강계미생물연구소 소속 연구원 이모(47)씨가 지난달 6일 필리핀을 거쳐 핀란드로 망명했다고 국내 한 북한인권단체가 2일 밝혔다고 보도함.
  - 이 단체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곁으로 내세운 망명 이유는 연구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이씨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유리 속에 가둬놓고 사린가스 실험을 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평양공항 신청사 개관…김일성 초상화 사라져(7/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신청사 사진을 보면 상징물처럼 내걸려 있던 고 김일성 주석의 대형 초상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함.
  - 대신 전면 좌우측 상단 모서리에 한글 ‘평양’과 영문 ‘PYONGYANG’이라는 전기간판이 설치됐다고 뉴스는 덧붙임.

- 「말라리아의 날」행사, 6.30,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진행 및 중앙과 각 도들에서 말라리아 방지 위한 집중 선전·예방활동 전개(6.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단장 : 김영웅 히로시마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6월 30일 평양 출발(6.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 황성학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7월 2일 평양 출발(7.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7.2, 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홍휘)·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 김윤선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교장), 7월 3일 평양 도착(7.3,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6자회담 재개 북한에 달려…비핵화 조치 취해야”(6/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하프 수석고문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은 최근 반대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하프 수석고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북 제재강화에 반대할 경우의 대책에, “우리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함.
  
- 미국, “북한, 영변 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 운영 추정”(6/7, 연합뉴스)
  - 미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군축·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영변 이외에)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clear likelihood)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LWR)에 주목하며 “만일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북한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발전의 원천을 제공하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데 잠재적으로 이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의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부는 또한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하고, 공격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함.

## 나. 미·북 관계

- ‘핵탄두 탑재 北 ICBM 무력화’ 미 요격미사일 망에 구멍(6/1, 연합뉴스)
  - 미국이 핵탄두 탑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에 배치한 33기의 요격 미사일에 두 개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됨.
  - 3단계로 이뤄진 이 요격 미사일은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망(GMD)의 핵심으로, 지하 격납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적 미사일 공격 시 모습을 드러내며, 각 미사일에는 탄두 부분에 해당하는 ‘킬 비히클(kill vehicle)’이 장착됨.
  - 조사 결과 미사일 유도 체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배선 봉치(wiring harness)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습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 격납고에 보관 중인 미사일이 부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짐.
  
- 북한, 미국과 한 테이블 못 앉아…6자회담 거부(6/2, 연합뉴스)
  - 북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1일 평양을 찾은 독·한의원친선협회 의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원을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 통신이 보도함.
  - 궁 부상은 “미국의 의도는 우리를 협박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 근거를 덧붙였음.
  - 한편,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다른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독일과 북한 관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의회, 대북 원조·경제지원 계속 금지(6/6,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음.
  - 국무부의 경우 해외 빈곤국에 지원하는 예산인 ‘경제원조기금’에서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도 대북 지원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명시함.
  - 외교소식통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회 내부의 기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지린성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北무봉관광특구 공동개발(6/3, 연합뉴스)
  -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시는 무봉노동지구역의 관광특구개발에 발맞춰 북한 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해 상호호혜 원칙에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함.
  - 개발에 참여한 광성투자회사는 무봉지구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에 착수했으며,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육상 관광을 시작할 계획임.

#### 라. 일·북 관계

- 北, 조선총련측에 재일조선인 첨단 기술자 접촉 지시(6/2,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아들인 허정도(50) 씨 자택에서 ‘첨단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재일 조선인 기술자와 접촉하라’는 북한의 지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경찰이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 혐의로 지난달 체포한 허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며, 2013~2014년 초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경찰은 조선총련이 기술자 회유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기술을 유출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임.
- 북일, 5월 하순 베이징서 일본인 납북자 비공식 협의(6/7, 연합뉴스)
  - 북일 외교 당국자가 지난 5월 하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베이징에서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음.
  - 북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비공식 협의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5월 24~26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음.
  - 일본 측은 협의에서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 종료 시점인 7월이 곧 다가오고 있어

조사 내용의 신속한 보고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두드러진 진전이 없어 공식 협의가 재개될 전망은 아직 없는 상태임.

- 북한은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사건과 관련, 허종만 재일조선총련 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것에 반발해 “정부간 대화도 불가능해졌다”고 일본 측에 통지했으며, 이번 비공식 협의는 북한의 이러한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면하 대일 교섭 창구는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도 김정은 2차 대전 승전행사 불참 이유 몰라(6/4, 연합뉴스)
  - 러시아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북한 특사가 김 제1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확인했으면서도 오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함.
  - 이 소식통은 “러시아 측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며 누구도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해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 러시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러 경제협력 걸림돌”(6/6,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을 제외하면 협력 사업이 가능한 통로가 매우 좁다며 북한이 대북 제재를 벗어나려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말함.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루블화를 양국 간 교역의 결제 통화로 이용하는 등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역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6/2,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 이라는 표현이 등장, 기존의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 조항엔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이 조항에 거론된 ‘핵무장국’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NPT상으로 북한은 ‘핵비보유국’로 간주되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핵무장국’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미군, “북한과 관계개선때 유해발굴 첫 임무”(6/2, 연합뉴스)
  -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그레이 쇼우 미국 전쟁포로·실종자(POW/MIA) 담당국 지역조정관이 밝혔음.
  -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2005년 미국 발굴팀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중단했으며, 2011년 북한과의 합의로 재개했으나 이듬해 3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로 또다시 중단한 바 있음.



-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기간 약 8천명에 달하는 미군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유해발굴팀에 따르면 장진호 부근 평양 북쪽 60마일 일대에 5천 500구에 달하는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北 억지력 강화’ 한미 연합사단 공식 출범(6/3, 연합뉴스)
  - 한미 양국군의 첫 혼성 사단인 한미 연합사단이 의정부 미군 부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3일 공식 출범했음.
  - 미 2사단을 모체로 만들어진 한미 연합사단은 세계적으로 2개국 혼성 사단의 첫 사례로, 평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행태로 운영되다가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기계화보병여단으로 편성됨.
  - 한미 양국은 평시에도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자 작년 7월 연합사단 창설에 합의했음.
- 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 “한국,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 높여야”(6/4,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 시도를 비판할 정도로 이번 사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아·태 지역 핵심 동맹으로서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번 사안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주요 현안을 고리로 한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 정부, “美남중국해 언급, 우리에게 새 역할 요구 아니다”(6/4,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니얼 러셀 차관보의 언급과 관련해 “일반론적 차원의 견해 표명”이라면서 논란 확산을 경계했음.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러셀 차관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의제 가능성 등 한미 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우리 정부에게 이런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대미 공공외교 예산, 일본의 8분의 1 수준(6/7, 연합뉴스)

-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한일 외교전의 주무대인 미국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는데 쓰이는 외교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일본이 민·관을 통틀어 대미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은 최소 1천70만 달러(한화 약 119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공공외교 전담조직인 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의 연간 예산은 일본의 8분의 1 수준인 15억원에 불과함.
- 일본의 이 같은 ‘투자’는 미국 조야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을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FTA 정식서명에 친서교환…“역사적 이정표”(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하고 가오 부장으로 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우리 측 친서 역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함.
- 시 주석은 친서에서 한중FTA가 “양자 간 통상 관계의 새로운 비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박 대통령은 이번 FTA는 양국에 폭넓은 이익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함.

- 中, “정의 목소리 들어야”…박근혜 대통령 대일메시지 지지(6/2,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발언 평가 요구에 “우리는 일본정부와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 “(일본의) 역대 내각이 침략역사에 대해 정식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반성했던 정중한 태도와 약속을 지키고,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에 역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실제 행동으로써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다. 한·일 관계

- 박근혜 대통령, “日 역사인식 중요…아베담화 기회 잘 살려야”(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한일현인회의(韓日賢人會議)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한일 우호 관계를 지탱해온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 등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종전 70주년인 올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8·15 담화(아베담화) 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건강한 바탕 위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위안부 관련한 일본의 결단, 양국의 입장 차이는 대화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함.
  - 모리 전 총리는 “아베 총리도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라야마·고노 담화에 기초해 행동하고 있음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함.
- 한일 국방정보본부 2년 만에 교류…北 정세 논의(6/2,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 본부장의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 국방정보본부간 회의는 연례적인 것으로, 1971년부터 61차례 진행됐으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열리지 않은 데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방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함.

■ ‘日 세계유산’ 9일 분수령…한일, 서울서 2차 협의(6/6,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2차 협의회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열린 1차 협의에 이은 후속 협의임.
- 정부는 관련 시설에서의 강제노동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그동안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으며, 타협에 실패할 경우 결정권을 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양국간 외교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 정부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등재권고안’을 고리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코모스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중국의 남중국해 공격적 행보에 딜레마 빠진 미국(6/1, 연합뉴스)

-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행보를 방관하자니 동맹국들과 멀어질 것 같고 공세적으로 나서자니 신냉전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동맹국들 앞에서 중국의 기세를 막아낼 지역의 균형자를 자임했고,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역동적 시장을 보유해 세계를 양분할 수 있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게 중론임.
  - 딜레마에 빠진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성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WSJ는 시 주석이 권 영유분쟁 지역에 매립 영토를 증축하는 작업을 중국 굴기의 상징으로 해석함.
- 중국 국방부, “인공섬 건설, 외부간섭으로 중단되지 않아”(6/1,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인공섬 건설 조치에 대해 “외부의 간섭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보도함.
    - 제 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관유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은 중국의 도서(인공섬) 건설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혔고 주권도서 위에서의 활동이라고 부연했으며, 카터 장관이 중국 인공섬 건설에 의문을 제기 한 것은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축함.
    -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중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 中 남중국해 패권행보에 “팔꿈치 반칙 하지마라”(6/2,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청년 리더들과의 타운홀 간담회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련 국가들, 특히 중국은 현행법을 존중하고 힘에 의존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법에 의한) 접근법을 잃기 시작하면 이는 분쟁으로 번져 힘에 의한 주장이 나오기 마련이며 아시아와 태평양의 번영도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이 어떤 면에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팔꿈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인공 섬을 건설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같은 공격적 행위가 오히려 지역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필리핀·베트남, 미국·일본과 남중국해 ‘연대’ 강화(6/2,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방위 장비를 지원받아 중국에 대한 견제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임.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재임 중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해 나흘간 머물며, 특히 4일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대처를 위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이 같은 협정의 교섭 개시를 지난 달 25일 합의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 5월 각각 일본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했음.
  
- 오바마 대통령, “중국, TPP 가입 타진해왔다…결국엔 가입할 것”(6/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 시장의 질서를 좌우하는 상황을 견제할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PP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TPP의 규범에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음.
  - 그는 “구속력있는 노동·환경기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관세 축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미국과 11개국이 합의한다면, 중국도 이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남중국해 관련 미국 겨냥해 “평화의 길 걸을 것”(6/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 부 차관보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평화·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협력·공영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답변했음.
  - 화 대변인은 “우리는 결코 ‘국강필패(國強必覇·국가가 강해지면 패권을 추구한다)’와 ‘승자독식’의 낡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의 국가 주권과 안보의 결연한 수호자, 국제적 공평·정의의 충실한 수호자, 세계 평화·발전의 적극적인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러셀 차관보는 최근 강연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조치 등 영토주권 강화조치가



주변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는 의심을 품게 한다”며 중국의 의도를 비판한 바 있음.

- **중해커, 美연방정부 해킹해 공무원 400만 명 정보유출(6/5, 연합뉴스)**
  -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킹을 당해 공무원 400만명 정보가 유출됐으며, 근래 발생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임.
  - 특히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중국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미 언론들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제히 지목, 최근 잇단 정치·경제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간 갈등을 증폭할 전망이다.
  -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각 부처·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보직경력, 업무 능력 평가, 건강관련 자료 등 각종 신상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며, 미국 정부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한편,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은 대개 익명으로,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며 근원을 찾기 어렵다”며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가능성’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함.
  
- **주중 미국대사 티베트 방문…라싸에 영사관 설립 희망(6/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가 최근 티베트 자치구를 했으며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에 영사관을 설립하길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티베트 방문과 관광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티베트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티베트와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라싸 주재 영사관 설립을 요구해왔음.
  -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이 자국의 티베트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권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미국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강압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분신사태에 다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에 티베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바. 미·일 관계

- 아베 총리, '일본 공격할 의사 부인해도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6/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해당 시 미국 등을 공격한 국가가 일본까지 공격할 뜻을 부인하더라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해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함.
  -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은 ①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②이에 대항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③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베 정권은 이를 일본이 아닌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음.
  - 아베 총리는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종합적으로 일본에 미칠 전화(戰禍)를 판단해 대응 한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행사로써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日, 아베 총리 방미 후 美첨단무기 집중 매입...한 달 새 5조원 이상(6/3, 연합뉴스)
  -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일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힘.
  - 미 국무부는 일본과 지난달 5일 30억 달러(한화 약 3조2천억 원) 규모의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의 판매 계약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1억9천 900만 달러 상당의 UGM-84L 하푼 미사일 관련 장비·부품·훈련과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는 무기판매의 결정권을 쥐 미국이 아베 총리 방미와 이를 계기로 이뤄진 방위지 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며,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미 최신에 이지스함, 일 요코스카 항 첫 배치(6/2, 연합뉴스)
  -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은 미국 해군 이지스 순양함인 쉐설러스빌 호가

지 난달 28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출항,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향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음.

- 찬셀러스빌호는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항공모함 강습단을 보호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고 있으며, 해상안보 작전을 펼치거나 일본 자위대와 같은 동맹군과의 합동훈련에 투입될 예정임.
- 미 해군은 순양함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조지 워싱턴 항모 대신 성능을 개량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며,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BMD)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벤폴드, 밀리우스 호도 각각 올해, 2017년까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하기로 함.

#### 사. 미·러 관계

- 미국, 대러시아 세몰이…독일서 군사대응책 논의(6/5,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미국과 유럽의 국방, 외교 관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중거리 핵미사일폐기 조약(INF)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언급한 적이 있음.
  - 러시아는 그동안 이러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 러시아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려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무력 대응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제 평화유지군의 자국 배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러시아가 무력 개입에 나설 경우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임.

## 아. 중·일 관계

- 중·일, 5년 만에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 재개(6/4,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베이징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5년여 만에 재개함.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5월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정상 회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한 교섭 방침을 확인했으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0년 2월을 끝으로 협의가 중단됐었음.
  - 양국은 작년 11월과 올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이후 역사 인식이나 영유권 분쟁을 놓고 대립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 아베 총리, 중국견제 전 방위 외교…호주·필리핀과 연대 박차(6/4, 연합뉴스)
  - 일본은 중국의 활발한 해양진출을 경계하는 호주, 필리핀 등 제3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압초 매립 문제를 제기할 태세임.
  - 아베 총리는 4일 오후 도쿄에서 열리는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압초 매립 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對) 중국 공조를 염두에 둔 안보 협력을 결의했으며, ‘P3C 초계기’ 등의 수출을 염두에 둔 채 필리핀과의 방위장비 이전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음.
  -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3일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면담하면서 방위 분야 공조 강화에 뜻을 같이했으며, 일본 언론은 최근 ‘준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된 호주와의 관계강화는 단연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함.
  - 더불어 아베 총리는 7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중국의 남중국해 압초 매립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중국·일본, 아시아 인프라 선점경쟁 확산일로…태국 등 이득(6/5, 연합뉴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에

맞서 일본이 아시아 신흥국에 1천100억 달러(약 120조원) 투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이 선점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고속철 건설 시장에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음.

-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미 주요 국가의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앞서고 있는데다 AIIB 흥행몰이까지 감안해보면,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이끄는 일본에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사업비용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우세함.
- 일본은 앞선 기술력과 초저금리에 따른 낮은 자금 조달 비용, 풍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험 등을 내세워 중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음.

#### ■ 중국-일본, 3년 만에 첫 재무장관 회담 개최(6/6, 연합뉴스)

-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었으며, 이번 5차 양국 재무장관 회담은 무려 3년 2개월 만에 개최된 것임.
-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게 회담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관측됐었음.
- 양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낸 공동성명에서 실리를 위해 함께 재정을 논의하고 예산, 과세,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채 관리, 관세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심화하고 아울러 금융부문 협력을 늘리면서 교역과 투자 부문 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금융부문 협력을 촉진하고 아세안(ASEAN)+3 국가들의 이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음.

### 자. 중·러 관계

#### ■ 중국-인도, 러 최신형 탱크 아르마타 구매에 관심(6/4, 연합뉴스)

-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코진 군사기술협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의 전통적 파트너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르마타 탱크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 무기는 신형으로 고가”라고 설명했다.

- 코권은 다만 신형 무기가 먼저 러시아군에 보급 후에야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전문가들은 최소 3년 뒤에야 아르마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이 탱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펼쳐진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신행 탱크로, 작동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포탄에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했으며, 3명의 승조원을 전면의 강화장갑 격실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임.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없다…교화소만 존재할 뿐”(6/3, 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부정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미국의 친북 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 대표와 형사범들을 다루는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 간의 특별대담을 마련했음.
  -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수용소 내 최악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인권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이 교화소 당국자 인터뷰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친북 인사를 앞세운 인터뷰인데다가 인터뷰 내용이 북한 찬양 일색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짐.
  - 민족통신은 3일 노 대표가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 김 결 상좌, 대외사업국 부국장 정영권 상좌, 교화국 지도원(말단 직책) 김성일 중좌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민족통신 방송인 민족TV와 유튜브로 공개했음.
  - 북한 교화국 당국자들은 인터뷰에서 교화소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 세면장과 화장실,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돼 있다고 선전했음.
  - 또 점심식사 후 낮잠시간도 주고 오후 6시 작업이 끝나면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시간도 준다고 하며 “폭력을 가한다든지 밥도 안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며 “정기검진과 목욕, 세탁, 소독을 철칙으로 해왔다”고 강변했음.
  - 특히 교화인들의 노동은 기본이 농업과 축산이어서 먹을 것이 항상 있다며 “밖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안준다고 하는데, 식사도 안준다고 비방하는 소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 돼지고기 같은 육류도 공급하고 명절과 기념일에는 특식도 준다고 덧붙였음.
  - 이들은 그러면서 “밖에서 알지도 못하고 중상모략하며 폭력이니, 매달아 때린다느니, 교화인 거처에 쥐가 우글거린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들으면 교화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격분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음.

- 북, 한국드라마 본 대학생들 처벌(6/3,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특정드라마가 평양시 대학생들 속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사법당국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처벌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 평양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한 소식통은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본 학생들은 해당 초급당위원회에 자수하라는 지시가 4월 초 평양시의 모든 대학들에 내려졌다”고 이야기했다.
  -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1980년대 초 북한이 처형한 영화배우 ‘우인희 사건’을 다룬 12부작의 한국드라마라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 이 드라마는 16기가 소형 메모리칩에 담겨 유포되면서 주로 손전화를 통해 많이 시청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 특히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그동안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었던 김일성 시대의 북한사회를 실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양시의 젊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속에서 급속히 확산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일각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외형상으로 많이 닮았고 행동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실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이 드라마에 더욱 열광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간부는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철도대학 학생 5명이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또 지난 4월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보았다고 당국에 자수한 평양시 대학생 30여명은 1년간의 ‘혁명화’ 처벌을 받아 주변 건설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두고 자수한 학생들은 3년 동안 현장체험을 하도록 졸업장 대신 ‘수료증’만 주었다고 그는 언급했다.
  
- 국제사회, 북한 정치범수용소 존재 증거 다수 확보(6/4, 미국의소리)
  - 북한은 3일 미국의 친북매체인 ‘민족통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다.
  -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은 이 매체와의 대답에서, 북한에는 죄 지은



-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음.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위성사진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위치가 파악됐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임.
  - COI는 북한이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14호 개천관리소, 15호 요덕관리소, 16호 명간 (화성)관리소, 25호 청진관리소 등 4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 이 웹사이트는 북한 내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살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이 감출 게 없다면 유엔을 비롯한 인권 감시단체들에 수용소를 즉각 개방해 북한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음.
- 北 “서울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수수방관 않겠다”(6/4, 뉴시스)
- 북한이 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이달 중 서울 설치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북인권사무소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괴뢰패당과 추종세력이 유엔현장과 국제법에 정면으로 도전해 주권국가를

-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고 비판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한사코 훼손시키고 반공화국 고립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특대형정치도발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백두산총대는 서울에서 북인권사무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2. 북한 인권

- 당국자 “北인권 이제 시작…압박강화가 대화 노력”(6/1, 연합뉴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동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awareness’(경각심)를 ‘awakening’(자각)한 정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포럼, 정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NGO(비정부기구)도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겠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7일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친 바 있음.
  -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머릿속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권문제와 핵문제는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압박 이외에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화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방편으로서의 하나가 압박 강화”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실효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 더 실효적 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병세, 北문제에 “인권 존중 없이 평화·안정 없어”(6/1,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인권 측면에서도 북한을 바라보기 위해 전체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한반도·동북아 상황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도 아우르는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integral part)”이라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의 이런 언급은 인권 문제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요소로 중요하게 시사한 최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동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윤 장관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임을 상기하면서 “동아시아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고도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본받아야 한다”며 “유럽의 협력과 화해는 과거 잘못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과거로부터 깨끗이 단절하고 현재에 보다 책임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차대통령, 스위스 외교장관 접견…北비핵화·인권개선 지원요청(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참석차 방한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스위스 관계 및 지역 정세, OSCE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지난 60여년간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위스 정부가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음.
- 부르크할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및 대북 인도지원 등의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응하도록 가능한 설득 노력을 해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국제사회, 최근 대북 인권 개선 압박 강화(6/3, 미국의소리)

-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의 미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음.
-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임.
-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 법대 교수, 북한인권 유린 고발(6/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북 일리노이 대학(Northern Illinois University)의 몰스 탄 (Morse Tan) 법대 교수는 ‘북한, 국제법, 그리고 두 가지의 위기’라는 책은 미국에서 성장한 자신이 오래 전 대학 시절 북한인권 참상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느낀 충격으로 연구를 시작해 약 10년 만에 완성됐다고 말했다.
  - 탄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사이버 공격, 핵무기 개발 등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통한 안보 위기,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북한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며 북한의 두 위기, 인권과 안보 위기를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여성 인신 매매, 종교 탄압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인권 침해와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탄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법을 어떤 식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기본 문서들의 조사를 통해 수많은 탈북자들의 사례들을 모아 이들을 책에 수록했음.
  - 즉,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감금과 고문,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행 등이 왜 국제법의 위반인지를 설명하고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 “북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해야”(6/5, 미국의소리)
  - 유럽의회 내 의원모임인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유럽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지도자 개인숭배 이외의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명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런 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런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북한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남북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 제출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밖에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과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음.
- 유럽안보협력기구 “북한 등 아시아 인권 문제 다룰 수단 필요”(6/5, 미국의소리)
-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이 함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참석 차 한국을 방문 중인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접근법과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음.
  -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동구권의 인권 문제를 다뤘던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권 개선을 통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과 구 소련 그리고 유럽 35개국은 지난 1975년 정치와 군사, 경제, 환경 분야와 더불어 인권 분야까지 포괄하는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냉전 극복과 통합의 기반을 닦았음.



### 3. 탈북자

- 미 입국 탈북 난민 181명(6/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최근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두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음.
  -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한 것은 지난 1월 한 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후 4개월 만에 처음임.
  -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음.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난민 지위를 부여한 탈북자 수는 181명임.
  - 미국은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 2009 회계연도에 25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음.
  - 2010 회계연도에 8명으로 감소했던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2011 회계연도에 23명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20명 안팎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음.
  - 그러나 2014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의 수는 8명으로 감소했음.
  -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경계 강화와 그로 인한 탈북 증가비 급증, 게다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 강화가 겹쳐 탈북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한편,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대변인은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 이날 발표된 2015년 1/4분기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이민난민국이 심사한 탈북 난민 신청은 44건임.
  -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난민 지위를 거부했고, 나머지 26건은 신청자 스스로 심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았음.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18건의 탈북자 난민 신청을 심사해 단 한 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음.
  -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를 색출하면서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한 추방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캐나다는 2007년 처음으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한 이후, 2012년 가장 많은 222명을 포함해 지난 3월말까지 총 47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했음.
- 캐나다서 탈북자 영어교육 지원 행사(6/5,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앨버타주의 주도인 애드먼튼(Edmonton)시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에서 오는 18일 북한인권토론회 ‘북한인의 목소리(North Korean Voices)’가 열림.
  - 이 행사 입장료와 기부금 등 수익금 전액은 미국인 케이시 라티그(Casey Lartigue)씨와 한국인 이은구 씨가 2013년 3월부터 운영해 온 한국 내 탈북자 영어교습 프로그램(TNKR: Teach North Korean Refugees) 지원에 사용됨.
  - 이 행사는 앨버타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소말리아 난민출신 캐나다인 바쉬어 모하메드(Bashir Mohamed) 씨와 라티그 씨가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이 되면서 추진되었음.
  -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책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모하메드 씨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라티그 씨의 영어교습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겠다고 자원했음.
  - 라티그 씨는 모하메드 씨에게 먼저 캐나다에서 북한인권을 알리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 토론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쉐론 장(Sharon Jang) 씨와 켄 이라고만 밝힌 탈북 남성이 인터넷 화상전화로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임.

#### 4. 이산가족

- 미 의원들, 케리 국무에 “재미 북한 이산가족 상봉 노력” 촉구(6/4,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음.

- 두 의원은 케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방 이후 70년간 수백만명의 한인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있는 상태”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이산가족들 간의 상봉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들은 케리 장관에게 “국무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보고서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해온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지난해 3월 재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H.Con.Res 91)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되자, 올해 114대 회기 들어 로이스 위원장과 함께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WFP “대북식량지원 연말까지 연장”(6/3, 자유아시아방송)
  -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진행되던 유엔 식량구호기구의 북한 내 지원 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임.
  - 세계식량계획의 프랜시스 케네디 본부 대변인은 오는 12월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 케네디 대변인은 지난 주 세계식량계획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례 이사회가 열렸지만, 새로운 북한 지원 사업을 논의하지 않았으면서 대신 기존의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곧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까지 북한의 8개 도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약 180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함.
  -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은 각각 약 76만 명과 80만 명으로 당초 계획의 열 명 중 네 명꼴에만 식량을 제공하는데 그쳤음.
  - 케네디 대변인은 지원의 연장 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이후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촉구했음.
  - 케네디 대변인은 대북지원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2천8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굿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3천 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식량계획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금한 액수는 3일 현재 7천 500만 달러로 목표액 1억 3천 700만 달러의 약 55% 수준임.
- 美 “대북 식량지원 계획 없어…요청 안 해”…美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인도주의 지원, 정치나 안보 문제와 별개”(6/3, 데일리NK)
- 북한이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현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 역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현재 북한은 6자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홍수·태풍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중단된 상태임.
  - 대변인실 관계자는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결정적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들었음.

- 그는 “지원대상이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 북한은 그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 분배 감시요원 수를 제한해 분배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011년, 2013년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농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미국은 지난해 이 조항을 삭제한 농업법안을 의결했음.
-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규모는 2004년 약 3200억 원에서 2014년 약 540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음.

■ 프랑스 정부, NGO 통해 45만 달러 대북 지원(6/5, 미국의소리)

-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45만 (453,515) 달러를 지원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3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황해남도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4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 4월부터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임.
-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었음.
-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은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음.
- 앞서 유럽연합은 이 단체가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료 증대 사업에 미화 48만 달러를 지원했음.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도 올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음.

- 유진벨 “북한 결핵병동 4채 추가 건설 계획”(6/6, 미국의소리)
  -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올 가을 북한에 결핵 병동 4채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결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일부 북한 결핵 시설에서는 환자 다섯 명이 병실 하나를 같이 나눠 쓰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진벨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손쉽게 지을 수 있는 형태의 조립식 패널 병동을 설계, 제작했음.
  - 이어 지난 4월 20일부터 3주간 북한을 방문해 평양 인근에 조립식 결핵 병동 3채를 세웠음.
  - 이 병동은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진벨 재단은 또 지난 방북 기간 중 북한 내 12개 다제내성 결핵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전달했음.
  - 이 단체의 스티븐 린튼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봄 방북을 통해 450명의 결핵 환자가 센터에 등록됐고 3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마쳤으며 현재 재단의 프로그램에 등록돼 치료를 받는 환자수는 모두 1천200명이 넘는다”고 말했음.

## 8. 북한동향

- UN 北 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지속 비난하며 ‘불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체제통일 망상도, 불순한 정치적 야욕도 UN 北인권사무소와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위협(6.1, 중앙통신·노동신문/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미련한 망동)
- 우리 정부의 6월중 ‘북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추진을 “흡수통일 야망실현 목적”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우리(北)를 압살하려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연일 비난 반발(6.3, 중앙통신·민주조선)

- 現 남북관계 긴장상태는 “남조선의 악랄한 체제대결책동(북핵불용 및 북인권문제 제기·전단지 살포 등)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책임 전가 및 대통령의 ‘연방제통일방안 외면, 체제통일 추구’ 비난(6.3, 중앙통신·노동신문/체제대결 망동이 빚어낸 극도의 불신과 긴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UN 北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며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및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 위협(6.4, 중앙통신/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